

# 현대 일본에서의 산골

## - 수용의 상황에서-

다니야마 마사코 (도쿄공업대학)

### 1. 목적과 문제의식

본 발표는 새로운 장송(葬送) 중 ‘산골(散骨)’을 주제로 산골이 현재 일본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간주되어 왔던 묘지를 대체하는 영대공양합장묘(永代供養合葬墓)와 산골, 수목장, 납골당 등의 새로운 장례법, 친척이나 지인의 조문을 받지 않고 추모하는 ‘가족장’, 무종교식 장례, 화장만 하는 ‘직장(直葬)’ 등이 점차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부터 일본 전국에서 인수인이 없는 유골과 매장되지 않는 시신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과제입니다<sup>1)</sup>.

최근에는 사후의 마지막 거처를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다양한 장송과 묘지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총리부가 199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산골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6.7%로 ‘인정해도 된다’는 21.9%를 크게 웃돌았지만 2011년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산골을 ‘인정한다’는 의견이 84%를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 면에서도 ‘산골을 희망한다’가 12.8%에서 35.8%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산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산골을 하는 업자는 200개사 이상이라고 하며 많은 업종에서 신규 비즈니스로 시작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본래 ‘추모하는’ 행위였던 것이 마치 유골을 처분하듯이 취급하는 업자도 나타나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2. 대상과 방법

조사 방법으로는 각 NPO 법인의 스태프와 회원(10명), 불교 사원의 주지와 계약자(7명), 기업 스태프(2명), 개인 산골 체험자(2명)에게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업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가족 인터뷰’(11건)를 이용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본 조사의 목적과 연구 성과의 공표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했습니다.

### 3. 결과

인터뷰 조사에서는 누가 산골을 결정(희망)했는지, 경위와 동기, 그리고 누가 산골을 시행했는지와 관련된 발언에 주목하여 분석했습니다. 경위와 동기에 대해서는 복수 요인이 언급되었습니다.

#### 3-1. NPO 법인 장송의 자유를 추진하는 모임(이하 ‘추진하는 모임’)

이 단체는 1991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연장(바다에 산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장송의 다양화가 인정된 것과 같은 시기인 1990년경부터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여 2019년 시점의 도쿄 23구에서는 매일 15명 이상이 고독사하고 있다고 추산된다(다니야마 마사코 2022).

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기존의 장송 관습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에 앞장선 것이 ‘추진하는 모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결정이 9개 사례 중 8건으로 그중 8건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6명이 ‘돌무덤(어두운 지면 아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등 기존 장송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묘소 파괴<sup>2)</sup> 등 ‘묘의 계승·유지 곤란’은 1건이었습니다. 산골은 모두 가족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추진하는 모임’은 자연환경 보호 사상과 사후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념에 공감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스스로 죽음과 사후에 대해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가 실행되도록 생전부터 가족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등 준비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 3-2. 지바현의 일련중 쇼에이잔 묘카이지절<sup>3)</sup>

근세 이후 계속되어 온 단가(檀家) 제도 및 기존의 묘 제도와 현재 일본 사회 모습 사이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공양과 묘의 형태를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2021년 5월부터 해양 산골을 시작했습니다. 종교와 종파를 불문하고 반려동물도 이용할 수 있는 불교식 장송으로 유골을 모두 바다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묘카이지절 경내에 있는 집합묘에 영대공양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른 생전 계약자 6명 중 5명이 은퇴 후 도쿄도 또는 가나가와현에서 가쓰우라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자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5명 모두 일치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풍광명미-자연의 경치가 맑고 아름다움-한 이 지역에서 보내고 세계와 연결되는 아름다운 외해에 잠들고 싶다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산골을 실시한 1명은 ‘묘의 유지·계승 곤란’을 이유로 부친의 산골을 한 ‘딸’이었습니다. 다른 계약자 5명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산골 실시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 3-3. 주식회사 하우스보트클럽<sup>4)</sup>

대표인 무라타 본인이 모친의 의사를 존중해 바다에 산골했던 경험에서 2007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신다운’ 마지막을 전하는 일의 소중함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장송을 제공함으로써 알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결과로는 11개 사례 중 8명이 생전 고인의 희망을 존중했습니다. 동기로 가장 많았던 것은 ‘바다(자연)로 돌아가고 싶다(7명)’였습니다. 그 밖에 ‘반려동물과 함께 산골해주었으면 한다’와 ‘묘의 유지·계승 곤란’이 1명씩이었습니다.

산골은 모두 가족·친척에 의해 행해졌고 친구·지인을 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를 전세 내서 각자의 취미와 의향을 살려 록 음악을 틀기도 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디저트 뷔페를 즐기기도 하고, 분홍색과 주황색의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축하 파티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6개 사례에서 ‘고인이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본인이 원했던 바대로’, ‘미련 없이 보내주고 싶다’는 의뢰인의 마음에 기업이 부응하는 맞춤형 산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 ‘묘소 파괴’는 관리하지 못하게 된 묘를 철거하고 유골을 새로운 묘나 납골당 등으로 옮기는 개장(改葬)을 가리킨다.

3) 소재지: 지바현 가쓰우라시

4) 소재지: 도쿄도 고토구

### 3-4. NPO 법인 야스라카안<sup>5)</sup>

대표는 진언종의 승려가 맡고 있습니다. 기존 장송의 지속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고인의 공양이나 묘의 획득·유지·계승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NPO를 출범하여 2001년부터 산골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은 8개 사례 중 3건이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계약 직후에 자살’, ‘묘의 계승·유지 곤란’이 각 1명씩이었으며 가족(남편·딸)에 의한 결정의 이유는 ‘묘소 파기(2명)’였습니다. 가족·친척 이외의 결정은 2건으로, 모두 집합주택의 집주인이었습니다. 방을 빌린 사람이 유골을 두고 가서 의뢰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고령의 입원 중인 의뢰인을 포함한 8건 모두 위탁을 통해 ‘야스라카안’의 스태프에 의해 산골이 행해졌습니다.

### 3-5. 개인 산골 경험자 A씨(남성, 60대), B씨(남성, 30대)<sup>6)</sup>의 경우

둘 다 해외에서, A씨는 모친의, B씨는 조모의 산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인의 희망을 존중해서 결정한 것은 사례는 B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묘에서 납골할 때 ‘고인이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라 급하게 산골을 결정했고 한 줌의 유골을 가지고 돌아가 그 후에 산골을 했다고 합니다(아들). 두 경우 모두 가족·친척에 의해 산골이 행해졌습니다.

## 4. 고찰

본 조사에서 다룬 35개 사례 중 본인에 의한 결정은 25건이었습니다. 본인(고인)의 동기·경위에서, 많았던 순서대로는 ‘자연(바다)으로 돌아가고 싶다(12명)’, ‘돌무덤(어두운 지면 아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11명)’로 바다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 ‘세상과 연결되는 기쁨’을 느끼거나 ‘바다 전체가 자신의 묘라고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다’ 등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마지막을 결정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드러났습니다. 한편, 묘소 파기 등 ‘묘의 유지·계승 곤란’을 이유로 든 2명은 ‘자녀가 없고, 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문제 해결책으로서 다다른 결론으로 산골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에 의해 결정된 사례는 ‘고인이 기뻐할 선택이라고 생각했다(8명)’라는, 생전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고인의 마지막 자기 결정을 돕는 것과 ‘기존의 장송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별을 하고 싶다’라는 자주성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의 유지·계승 곤란(2명)’과 ‘고인과 엮이고 싶지 않다(1명)’라는 동기에서는 생전부터 소원했던 고인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싶다’는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실제로 산골을 시행했는지와 관련해서는 30건 중 가족·친족에 의한 사례가 23건이었습니다. 제삼자(위탁)에 의한 것은 8건으로 이 중에는 누가 어떻게 사자의 장례를 치를지에 대한 선택이 제삼자에 의해 결정된 예도 있었습니다. 이들 결과로부터 산골이 반드시 ‘사후 자기결정권’이라는 적극적인 이유에서 선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가족·친족뿐 아니라 제삼자의 손에 의해 결정·실행되고 있다는 현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추진하는 모임’이 출범된 1991년 당시에는 장례가 치러지는 고인 본인의 사상과 이념에 기반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에 따라 실현되고 있던 산골이 지금에 와서는 선조 대대로의 묘에서 손을 떼기 위해, 혹은 어떠한 사정으로 묘를 갖지 못하거나 추모자 부재 등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소재지: 지바현

6) 2명 모두 도쿄도 거주

## 5. 결론을 대신하여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장송과 묘의 유지관리가 후계를 전제로 한 가족에게 맡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장송을 맡는 역할이 가족·친족이나 지역 사람에게서 장례업자로 옮겨가, 가족 대대로의 묘를 유지한다는 전제는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장송에 대한 의미 부여와 문맥에 큰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사자의 존엄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오늘날의 장송의 여러 형태에 대해 사람들이 품는 진의는 그다지 문제시되어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 형성도 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모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례법과 관련해 법률에 따른 정의는 없고 산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후생노동성에서 2020년에 발표된 것에 그쳤습니다. 1948년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sup>7)</sup>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상정할 수 없었던 많은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사자와 이별하지 못했을 경우 유족은 그 후 생산성 저하나 심신증 등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도 있으며 현대 일본인의 종교적 감정에 들어맞는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장송의 의의를 묻고 생자와 사자의 관계성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 참고문헌

- 井上治代, 2003, 『墓と家族の変容』 岩波書店.  
金セツピョル, 2019, 『現代日本における自然葬の民族誌』 刀水書房.  
谷山昌子, 2022, 「行政が守る死後の尊厳」, 日本葬送文化學會『葬送文化』(23), 8-19.  
問芝志保, 2020, 『先祖祭祀と墓制の近代一創られた國民的習俗』 春風社.  
ブルーオーシャンセレモニー「お客様の聲 遺族様インタビュー」  
(<https://blueoceanceremony.jp/interview/>) (2022.7.12取得)  
槇村久子, 2013, 『お墓の社會學—社會が変わるとお墓も変わる』 晃洋書房.  
村上興匡, 2007, 「葬儀の変遷と先祖供養」  
『シリーズ宗教で解く「現代」 vol.3 葬送のかたち 死者供養のあり方と先祖を考える』 佼成出版社.  
森謙二, 2013, 「お墓についての意識調査」  
(<https://www.pref.kumamoto.jp/uploaded/attachment/50630.pdf>) (2022.6.12取得)  
——, 2014, 「死の自己決定と社會—新しい葬送の問題点—」  
『変容する死の文化 現代東アジアの葬送と墓制』 東京大學出版會.  
安田睦彦, 1992, 『お墓がないと死ねませんか (岩波ブックレット ; no.262)』 岩波書店.

(번역담당자:이지운)

7)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1948년 5월 31일 법률 제48호) 9조에서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행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관명되지 않을 때는 사망지의 시정촌장이 이를 행해야 한다. 앞선 두 개 항의 규정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을 행했을 때는 그 비용에 관해서는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1899년 법률 제9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